

## 남북한 해군 통합에 관한 연구 -동서독 해군 통합을 중심으로-

조성진<sup>1</sup>, 유지훈<sup>2\*</sup>

<sup>1</sup>해군 미래혁신연구단, <sup>2</sup>한국국방연구원

##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Navy -Focused on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Navy-

Seong-jin Cho<sup>1</sup>, Ji-Hoon Yu<sup>2\*</sup>

<sup>1</sup>Naval Future Innovation Research Group

<sup>2</sup>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요약**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에서 분단되었기에 독일을 대상으로 한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해군 통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군과 독일 해군의 통합과정을 살펴보고 남북한 해군 통합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독일 해군 통합과정에서 서독군을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었으며 통합 이전 수립된 Navy 2005 계획은 동서독 해군 통합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정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예고없이 통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남북간 해군 통합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추후 남북간 통합시 해군 통합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남북 통합 해군의 해군전략, 조직, 전력건설, 북한 해군 인력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Since Germany was divided under similar conditions to Korea,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Germany's military integration but little research on naval integ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German military and German navy to suggest directions for integrat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navies. West Germany led the integration of the German naval integration process. The Navy 2005 plan established before integrat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tegrating the East and West German navies. Considering North Korea's political characteristic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ntegration will occur suddenly one day, so sufficient planning and discussion are needed in advance.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o study the integration of the naval forc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clues to naval integration. This study proposes the naval strategy, organization, power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North Korean naval personnel for integrat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navies.

**Keywords** : Military Integration, Integration of Navy, Integration of German Navy, Maritime Strategy, Naval Strategy

### 1. 서론

남북한의 통합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시대적 화두다. 정권이 교체되고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변

화함에 따라 남북한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많은 논쟁을 낳고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열망과 계

\*Corresponding Author : Ji-Hoon Yu(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email: yjhnavy3@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2, 2023

Accepted February 6, 2024

Revised January 2, 2024

Published February 29, 2024

속되고 있다. 통합은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적인 실천이 중요하며, 갑작스럽게 벌어질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남북한의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그중 군사통합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군사통합이란 “서로 다른 군사사상 위에 수립된 조직, 기능 및 제도를 통일국가의 이념과 국가목표에 맞게 외형적으로 단일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내면 상태를 하나로 만들어 일체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자 만들어진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1].

군사통합은 극적인 방식보다는 평화적 수단으로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형태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군사력은 통합과정 중 양측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군부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정치성향은 이런 우려를 할 만하다[2].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과 대량살상무기는 처리 과정에 있어 세계의 이목이 주목될 것이다. 따라서 평화시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남북 군사통합을 연구해야 한다. 독일의 통합사례는 외부환경에 의해 민주세력과 공산세력으로 분단되고 다시 통합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기에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남북한 군의 통합과정을 독일군의 통합사례와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풍부하다(곽은경(2018), 성윤환(2021))[3,4]. 하지만 독일 해군의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남북한 해군 통합을 연구한 결과물은 국내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가치는 독일 해군의 통합과정을 통해 향후 남북한 군사 통합시 해군 통합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군 통합과정과 해군의 통합과정을 살펴본 이후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해군의 군사통합 추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 2. 본론

### 2.1 독일의 군 통합과정

동서독 간 군 통합에 대한 실제적 논의는 1990년 5월부터 병력 규모와 동독 군인 전역자 처우 문제에 대한 실무토의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군 통합 계획이 명확해진 것은 1990년 7월 16일 서독의 콜 수상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부터였다. 독일의 군 통합은 1990년 7월 17일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가 코카서스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독일 통합을 선포한 10월 3일

까지 7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5].

독일 군사통합의 주요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이후 동독에선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서독은 연방군(Bundeswehr)의 병력감축 계획안을 발표(89.11. 24.)하였다. 동독이 인민군의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는 결정(90. 1. 4.)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인민군의 불안감으로 해체 위기 동향이 발표(90. 3. 5.)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동독은 인민군의 대폭적인 감축을 시사하고(90. 4. 20.) 서독 역시 의무복무기간을 1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할 것을 발표하였으며(90. 7. 4.), 동독과의 통합조약(90. 8. 31.)에서 통독의 연방군 총 병력을 37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독은 군사교류 확대를 위해 동서독군 간 상호친선 방문 및 교류시행을 결정하고(90. 5. 7.), 동독군 장교 280명이 연방군 공군 장교 과정에 최초로 참여하였다. 동독 인민군 5만여 명의 연방군 편입계획 발표(90. 8. 3.)에 따라 서독 연방군 일부 부대가 동독에 파견되어(90. 8. 28.) 동독 인민군의 감축 감독 및 임무를 인수하였다. 아울러 양독은 ‘동독인민군의 법적 지위와 급료관계’를 정립하였고, 독일통합(90. 10. 3.)과 더불어 독일군의 통합이 이루어져 양독 국방장관 사이에 동독 인민군 명령권 인수인계가 진행되었다.

독일 연방군에 인수된 구 동독 인민군 병력 규모는 총 10만 명으로 직업군인이 6만명, 의무복무 사병이 4만명이었다. 독일 연방군 2천명이 동독지역에 파견되어 구 동독 인민군 부대에 지휘관 및 참모로 배치되었다. 독일 연방군 병력운용 계획상에는 1990년 10월 3일 부로 전 동독 인민군 10만명을 포함하여 1991년 총병력 505,000명을 운용하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상비전력 370,000명 선을 유지하는데 동부사령부 예하(구 동독 지역)에 전 동독 인민군 50,000명을 배속하였다. 관심을 끄는 것은 구 동독 인민군 퇴역실태로서 1990년 10월 2일 부로 대령급 이상 모든 장교와 장성, 55세 이상의 병사 그리고 모든 정치장교는 강제예편되었으며 부사관의 대다수는 자진 퇴역(젊은 부사관들은 병역의무를 마치면 대학입학의 특전이 있었음.)하였다. 한편 독일 연방군에 인수된 구 동독 인민군 장교들에 대해서는 구 서독군 장교들과의 균형을 위해 1-2계급 강등조치 되었으며, 24,000명의 구 동독 인민군 출신 장교가 연방군에 잔류하였다. 그리고 연방군은 구 동독 인민군 부사관 중 14,000명을 선발하여 받아들였다. 사기 및 복지를 위해

1990년 11월부터 일반병의 급료를 동서독군 모두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1991년 7월 1일부로 전역지원금 및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연방고용청과의 업무협조로 전역군인에게는 민간직 직능부여와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 잔류한 구 동독 인민군의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정훈교육을 시행하고 구 동독 지역에 파견된 서독 연방군 장병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서독이 군사적 통합에 있어서 취한 기본 원칙은 '구 동독 인민군의 신속한 해체와 동시에 서독 연방군으로의 편입'이었다.

또한 서독군은 군사통합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편성하였고 명확한 개념설정 아래 계획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독일군은 서독군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군사력 규모 조정을 통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동독군의 장비, 물자, 탄약은 유지, 폐기, 해외판매/이전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6].

## 2.2 독일 해군 통합과정

서독 해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NATO군과 밀접하게 통합하면서 발전해왔다. 서독 해군은 NATO군 연합전력의 하나였으며,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 참모총장의 지지 속에서 독일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해양 강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NATO의 해상방위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서독군이 1955년 나토에 가입할 때 동독 역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통합되며 해군이 창설되었는데 1950년부터 존재해온 국가해안경비대를 계승한 것이었다. 1960년에 동독 해군의 명칭은 인민해군(Volksmarine)으로 변경하였는데 1918년의 혁명 전통을 기념한 것이었다. 동독 인민해군은 공산당 이념에 강력하게 얽매어 있었으며 조직, 구조, 권한 면에서 옛 독일 해군과의 연속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였다. 인민해군의 주 임무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내에서 좁은 연안지역 내에서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후 동서독 해군은 1990년까지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각자 동맹체제 안에서 상호 잠재적 적으로 인식하였지만 무력 충돌은 없었다[7].

1980년대 후반 독일이 아직 통합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때 서독에서는 이미 "Navy 2005"이라는 연구가 구상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5년의 새로운 위협에 맞서 해군을 개조하고 비용과 인력, 작전, 정비 소요와 같은 자원 소모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동독 해군 통합

을 염두해 두지는 않았으나, 동서독 해군이 통합할 때 유용하게 쓰였다. 이 장기계획에 따라 통합 독일 해군은 동독 해군으로부터 어떠한 함정이나 무기체계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동독 해군 인원 중 계속 근무할 인원도 매우 신중하게 선발되었다. 동독 해군의 유산은 인원 8,300명, 민간근로자 3,700명, 시설물 129개, 전투함정 71척, 보조정 46척, 헬기 27대, 화기 43,000정, 탄약 14,000톤, 전차 및 장갑차 78대, 정찰전차 177대, 차량 5500대, 연료 1800톤, 의류 20만명분 등이었는데 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것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전적으로 쓸모가 없는 전력과 자산이었다. 모든 전투함정들은 매각하거나 폐기되었고 막대한 탄약은 민간도급업자에 의해 해체되거나 파괴되었다. 인력문제에도 마찬가지로였는데 통합 독일 해군은 구 동독 해군의 무기체계를 운용하거나 유지할 새로운 인원이 필요 없었으며, 인력 구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극히 일부의 동독 해군의 소수의 장교와 원상사급 부사관들만 받아들여졌다.

동서독이 상호 적대하고 있던 상황이 없어지자 통합 독일 해군의 임무는 큰 틀에서 변화하였다. 과거 독일 해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NATO 연합군이 북해를 통해 중부 유럽지역에 병력과 보급을 투입하고 발트해로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지역적으로 유럽 북부지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통합 이후 달라진 점은 발트해에 적대적 세력을 막기 위한 해상 능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정적인 임무만을 수행했던 해군은 국가외교안보 정책의 수단으로 그리고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으로서 부여된 임무가 변화되고 확대되었다.

변화된 독일 해군에 부여된 핵심임무는 3가지였다. 첫째, 국가와 NATO에 대한 방어임무인데 이것은 독일 해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었다. 특히 독일에 중요한 핵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정책수단으로서 해상현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인 독일은 국제자유무역과 바다를 통한 해외 원자재 수입에 큰 의존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통합 당시 독일은 석유 95%, 망간, 크롬, 구리, 티타늄, 철 100%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또한, 국가 전체의 해외무역의 50%가 해상교통로에 의존하였으므로 독일의 해상무역과 항구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무로 부상하였다. 둘째, NATO 동맹 결속을 위한 위기관리와 분쟁 억제였다. 독일 해군은 위기와 분쟁을 막는 핵심 전력으로서 유럽대륙과 해상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에 대한 관리 역량을 요구받았다. 예컨대 동맹국 간의 해상 수송 보호, 연

안 초계, 해의 병력지원 및 철수 지원 등이 있다. 다른 NATO 국가들도 해상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럽대륙과 북미대륙을 잇는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었다. 셋째, 유럽의 안정 및 통합과 국제 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기능을 떠나 외교정책의 도구로서 유럽연합의 통합을 위해 다른 국가와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임무는 갈수록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 해군들과의 상호교류와 연합작전을 통해 유럽연합의 통합에도 이바지하고 있다[10].

독일은 군사 통합 과정에서 철저히 구 동독군을 배제하고 서독군 중심으로 통합을 진행하였다. 해군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사전에 수립된 서독 해군 발전계획이 독일 해군 통합의 근간이 되었다. 서독 해군은 연안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해상교통로 보호, 위기관리, 국제안보 이바지 등 전통적인 해군전략으로 회귀할 수 있었다.

## 2.3 남북한 해군 군사통합 추진방향

### 2.3.1 통합 해군전략 수립

먼저 남북한 통합 해군 군사통합 이후 해군전략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정권이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권력체제가 흔들리게 되면 순식간에 국가 통제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서독은 앞서 살펴봤듯 1980년대에 "Navy 2005"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는 독일 해군 통합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 해군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해군 통합에 활용할 수 있는 해군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한 통합 해군전략은 첫째, 해상교통로(SLOC) 보호 임무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통합 이전 서독해군과 마찬가지로 대북 위주의 연안방어 전략을 강요받아왔다. NLL 방어와 같은 해상국지도발 대응이나 북한의 해상침투에 대응하는 것이 해군의 주 임무였으며 전통적인 해군의 임무인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해양국가로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1인당 선박 수가 많고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은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사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9].

둘째, 국제외교 행위자(Behavior)로서의 해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해군은 전통적으로 국제외교의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우리나라 해군은 대북 위주의 군사전략으로 인해 한반도를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현시(presence), 초국가적 위협 대응 등 국제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통합 이후 해군전략은 인도태평양 시대의 주류국가로서 국제적 역할 확대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모호한 전략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8].

셋째, 국제 안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해군의 임무 스펙트럼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HA/DR) 작전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규모 인력과 물자 파견이 요구되므로 해양을 통한 지원과 접근이 필수적이다. 우리 해군은 아덴만에서 청해부대 작전을 통해 해양안보 수호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성권력(Hard Power)과 연성권력(Soft Power)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어느덧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신장된 국력에 맞게 국제평화와 안정에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

### 2.3.2 통합 해군 조직과 전력

통합 해군은 독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민국 해군을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의 3개의 지역함대사령부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합 이후에는 연안에서의 경계작전과 분쟁대응의 필요성이 급감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함대사령부들은 하나의 연안방어사령부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상교통로 보호나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동함대 조직을 강화하여 해군 조직은 크게 (가칭)연안방어사령부와 기동함대사령부로 이원화해야 한다.

연안방어사령부는 한반도 근해에서 해양자원 보호, 불법조업 방지, 밀입국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임무를 기본으로 하고 잠재적 위협 세력이 한반도에 해양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 투사능력을 바탕으로 해상교통로 보호, 우방국과의 군사외교, 핵확산대응과 같은 해외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외교적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해양전략에 맞춘 전력건설이 필요하다. 남북 해군은 소규모 해상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전력 위주로 해군력을 건설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최근 20여년간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함정 전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500톤급 유도탄 고속함과 200톤급 고속정 전력도 동시에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1,000톤 이상의 대

형함정 건설은 포기하고 소형함과 잠수함 위주의 비대칭적인 소형 전력 위주로 해군력을 발전시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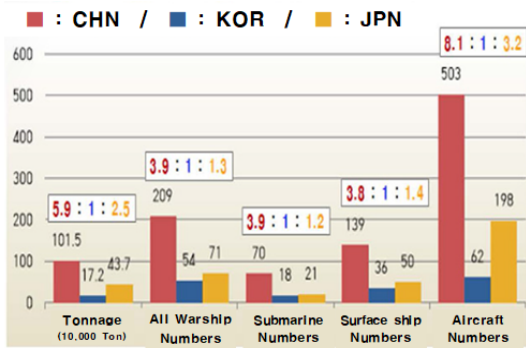


Fig. 1. Korea, Japan and China Naval Power Index

상륙·지원함을 제외한 수상 전투함정 숫자는 2022년 국방백서 기준 남한 90여 척, 북한은 420여 척인데 이중 1,000톤 이상급은 남한 30여 척, 북한 6척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통합 이전 동서독 해군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모두 강력한 해군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중·일 해군의 1,000톤 이상 잠수함, 전투함과 항공기 전력 지수를 비교하면 Fig. 1과 같다.

따라서 남한이 보유한 소형전투함이나 항만방어 정들은 단계적으로 퇴역하거나 개발도상국 등에 매각되어야 하며, 북한이 보유한 노후 소형함정들은 능력이나 운용 유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폐기돼야 할 것이다. 주변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안방어사령부는 기본적인 대함/대공/대잠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1,500톤 이상의 OPV(Offshore Patrol Vessel, 연안초계함)급 이상의 수상함과 1,000 ~ 2,000톤급의 중소형 잠수함들을 주축으로 구성하고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에서 일정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한 FFX Batch-III급 (4,000톤) 이상의 수상함과 3,000톤급 이상의 중대형 잠수함들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3.3 북한 해군 인력 활용방안

통합 이후 북한 해군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 역시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2022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해군 병력은 총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보유한 전투함과 전력들은 너무 노후되고 교리와도 맞지 않아 이를 운용하는 인원들의 활용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해군은 함정과 항공기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전하는 군이므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중요하다. 결국

현재 북한 해군 병력 대부분 전역 조치될 수 밖에 없겠지만 급격하고 일방적인 감축은 북한 병력의 반발과 사회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동독군은 급격한 감축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11]. 따라서 북한 해군 병력 중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해군 병력을 보조정이나 항만작업정과 같은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않는 해군 근무지나 육상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 충분한 보수교육을 통해 통합 해군의 병력으로 복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군이 아닌 민간 해운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해운은 Fig. 2에서처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12]. 기존 해운업 종사자와 같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보장해 준다면 북한 해군 병력 처리문제와 해운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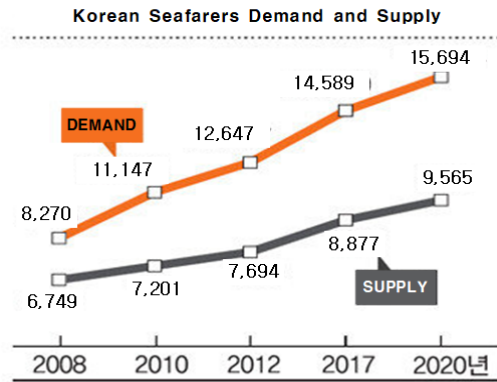


Fig. 2. Korean Seafarers Demand and Supply

## 3. 결론

독일은 통합을 진행하면서 군사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독일은 군사통합에 있어 구 동독군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해체함으로써 추후 있을 군내 갈등이나 국내 군사적 충돌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 독일 해군 역시 구 동독 해군의 장비와 물자 대부분을 흡수하지 않고 폐기하고 해체하였고 인력 역시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만 수용하였다. 동독 해군이라는 눈앞의 적이 없어지자 통합 독일 해군의 임무는 연안방어에서 벗어나 해상교통로 보호와 같은 전통적인 해군 임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군과 독일 해군의 통합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한 후 남북 해군의 군사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남북 해군의 통합 방안으로 해군 전략, 조직과 전력구조, 북한 해군 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으로 통합시 NLL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소형전투함 중심의 전력구조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경제안보의 핵심인 해상교통로(SLOC)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해군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해군 통합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해군전력 건설에는 최소 10~20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라도 통합 이후에 대비할 수 있는 해군 조직과 전력 건설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독이 해군통합 과정에서 사전에 수립된 해군 발전계획을 활용했듯이 우리 해군도 거시적인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갑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남북한 통합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해군 통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분야별 세분화된 분석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해군 통합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군 전력, 조직 구성, 기지 건설 방안, 인력구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Y. J. Kwon, South and North Korea Military Integration Initiative, KIDA, 2014, p.34.
- [2] B. H. Kim, "Overcoming Ideological Conflicts In Military Integration Process of the Divided County : Case Analysis on the Germany and Appl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s and Science*, Vol.73, No.1, pp.95-120, Jun. 2017.
- [3] E. K. Kwak, "A Study on the Identity Establishment of Korean Forces in Case of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through Mutual Agreement",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Vol.75, pp.71-108. Sep. 2018.  
DOI: <https://doi.org/10.21185/jhu.2018.9.75.71>
- [4] Y. H. Sung, "The Concept of Military Action to Conduct Military Integration in the Inter-Korean Reunification Process: Focusing on Disarmament, Demobilization, Reintegration", *Strategic Studies*, Vol.10, No.1. pp.3-30. 2021.  
DOI: <https://doi.org/10.34166/rokms.2021.10.1.3>
- [5] B. R. Song, "Lessons of the West-East German Military Integration on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Vol.10, No.2, pp.69-234, Feb. 2007.
- [6] H. M. Kim et al., "A Study of the direction to integrate the two Korea's Military Forces in Relation to Unification Policy: Focused on Germany Military Integration" *Korea Reserch Institute for Strategy*, Vol

29, No.3, pp.115-150. Nov. 2022.

DOI: <https://doi.org/10.46226/jss.2022.11.29.3.115>

- [7] Rahn, Werner. "German Navies from 1848 to 2016,"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0, No. 4, pp.13-47, Autumn 2017.
- [8] Ehle, Jürgen. "The German Navy after the Cold War and Reunification."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51, No. 4, pp.63-84, Autumn, 1998.
- [9] C. K. Lee, The Impacts on SLOC Security to Korea's National Economy, *Strategy21*, No.30, pp.31-62. Nov. 2012.
- [10] Andrew Yeo & Hanna Foreman. "South Korean - American pie: Unpacking the US-South Korea summit", 4.28. 2023.
- [11] Siegfried Gates, "The End of the East German Navy", *Proceedings*, Vol.117, Mar, 1991.
- [12] Y. A. Park, "Policy Recommendation on deficient Supply of Seafarers in Korea: Focusing on oversea transportation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Vol.8, Jun, pp.65-79. 2016.

조 성 진(Seong-jin Cho)

[정회원]



- 2005년 2월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학사)
- 2010년 1월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
- 2021년 3월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수료)
- 2023년 12월 ~ 현재 : 해군 미래 혁신단 작전능력 연구담당

<관심분야>

해양안보, 해군전략, 군사전략

유 지 훈(Ji-Hoon Yu)

[정회원]



- 2006년 12월 : 미국 해군대학원 안전보장학과 (안전보장학석사)
- 2013년 8월 : 미국 시라큐스대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 2022년 1월 ~ 현재 :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관심분야>

해양안보, 한미동맹, 외교/안보/국방 정책/전략